

Business Economics

月刊

# 企業經濟

1995. 9 통권 제26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月刊  
企業經濟  
1995. 9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이달의 시론	4	· 96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	송병락
경제 전망대	6	· 엔고의 퇴조와 조기 경기 하강 논의	
기획특집	주제 : 96년도 정부 예산 편성과 지원 과제		
	12	· 96년도 예산 편성과 경기 조절	박기백
	17	·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배정과 조세 지원의 확대	박종신
	25	·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재정 조정	배인명
	30	·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백중기
종시코너	36	· 금리 하락에 따른 주식 시장의 변화	백흥기
경제현안	38	· 대형 금융 사고와 예금자 보호	이승명
	43	· 경기 양극화와 중소기업 금융 지원 과제	임진국
	51	· 신국제 경제 질서의 방향	유재원
	57	· 북한 경제의 현주소	이영선
문화의 산책	64	· 도망고 내한 연주를 통해서 본 영상 산업에 대한 시각의 차이	강일모
고전명화의 감상	65		이영재
건강상식	66	· 허리디스크의 올바른 치료	이춘성

주제 : 서남아시아의 사회간접자본 현황과 진출 과제			
산 업 분 석	67	· 인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환경 전망	신승철
	72	· 베트남의 경제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전략	권 울
	81	· 필리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 전략	성광현
	87	· 미얀마 인프라 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김문영
	93	· 민·관 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김선덕
신경영 연구	98	· 大部·大課制度 하의 팀제 정착을 위한 과제	이준호
	105	· 조직 구성원의 비전 실현과 경력 개발	전성용
	110	·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와 해외 마케팅 전개 방향	한충민
	117	· 선진 기업의 경영 전략(VI) - 도시마(東芝)社	정기봉
월 레 특 강	119	· X세대 문화론	현용진
경 제 정 책	127	· 주요 경제 정책 및 이슈	
해 설 코 너	129	· 파생금융상품 관련 용어 해설	
신 간 안 내	130	· 연구 보고서 및 신간 안내	
주요 경제 지표	131		

통권 제 26호

등록번호 라-6125

등록일자 1993년 7월 8일

발행일자 1996년 9월 1일

편집 및 발행인 김종웅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주현 김원규

이영수 김선덕

류재현 고수일

배수현 박기백

이용우

편집주간 심재철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대표전화 (02)746-8041

F A X (02)746-805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 96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

송병탁 /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학

96년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 과정에서 볼 때, 여러 면에서 중요한 해이다.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면에서도 그러함은 물론이다. 우선, 새해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은 물론, 일반 경제 운용 방식도 보다 선진국 식으로 해야됨을 더욱 많이 느끼게 하는 해이다. 새해에는 또한 신경경제계획(1993~97)의 제 4차 년도이다. 신경경제계획은 계획 기간 내에 한국의 선진 경제권 진입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96년은 극히 중요한 한 해가 된다. 또한 4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맞이하는 첫해로서 지방자치나 지방화가 본격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방 예산이나 지방 공공재 생산 증가의 요구가 크게 되는 해가 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제 15대 국회 의원 선거의 해로서 정치 민주화도 가속화되는 해이다. 또한 95년에 대통령이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강조한 바 있듯이 사회 개발 투자 노력도 많이 해야되는 해이다.

경기 국면으로 볼 때는 아직 불확실한 면도 없지 않으나, 경제 성장 추세는 95년에 다소 둔

화되고, 96년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와 경기의 안정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그러므로 재정의 자원 배분, 경제 안정, 소득 분배 개선 그리고 성장 잠재력 제고 등의 근본 기능 중 경제 안정과 성장 잠재력 제고 등의 기능이 중시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의 회복, 亞·太 지역 개도국 경제 성장의 호조, 그리고 동구권 경제 회복 등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97년까지도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한국 경제의 하강은 심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재정의 경기 부양 기능의 획기적인 재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므로 특히,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포함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사회 개발 및 농어촌 문제 해결 등에 많은 재정 정책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96년의 세입은 57.7조 원으로서 95년에 비하여 15.4%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율에 있어서는 전년도 증가율 15.6%와 대동 소이하다. 특별 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는 통합 예산 규모는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즉, 1996년의 경제 성장률이 경상 가격 기준으로 13% 내외로 전망되고 재정의 경

기 팽창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 금액은 일반 회계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14~15% 증가한 수준 즉, 80.5조 원에서 81.2조 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 재정은 95년에는 약 1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나 96년에는 균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MF는 재정충격지표(Fiscal Impulse Indicator)를 사용하여 재정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FII가 플러스이면 확장 재정 정책, 그리고 마이너스이면 긴축적 재정 정책이 된다. 이 기준으로 보면 95년의 재정은 예산 면에서는 긴축 정책이나 결산 면에서는 확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96년에는 조세연구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 조절 기능을 중시할 때 FII를 0~0.5로 유지하는 것 즉, 균형 예산이나 미세한 적자 예산이 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하겠다.

한국의 재정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경제 안정 기능 면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어 왔으나, 자원 배분이나 소득 분배 그리고 성장 잠재력 제고나 경쟁력 강화 등의 면에 있어서는 열위에 있었다고 한다. 96년의 재정 운영 등의 일반적 방향은 단기 경기 국면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과 국내 임금 상승 요인에 의하여 물가 상승 및 경제 성장 둔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보면 균형 예산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하겠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내년의 예산 운용은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 기본 결정 요인의 하나이고 또한, 그 부족의 심화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특히, 각급 수송 부문의 애로가 심함으로 이 부분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교통세 도입으로 수송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하역료, 공항 시설 사용료 등 각종 SOC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추가 재원을 조달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SOC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 투자이다. 과학 기술 투자는 그 장기 목표인 GNP의 3.5% 수준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96년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 투자인데, 교육 투자 중에서는 특히, 국가 경쟁력과 보다 관계가 많은 대학 교육 투자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이다.

WTO 출범과 더불어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의 증대도 필요하다. 그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교부금의 합리화이다. 각종 지방 단체로 하여금 장기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또한, 교부금을 일시적인 消費用보다는 지방 경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각종 투자와 병행하여 정부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행정·재정제도의 혁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